

거대 야권 형성에 힘받는 '특검'

내달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처리 가시화
22대 국회서 김건희
한동훈 특검도 거론돼



“채상병 특검법 처리하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총선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크게 패배하면서 각종 특검법 추진이 동력을 얻고 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며 각종 특검을 띄우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 특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채보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표절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통점은 검찰 혹은 경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이 현 정권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의혹이다.

김 여사 특검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에 대해 명목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 등이 거론된다.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은 야권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대표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은 전북 전주를 당선인(전 서울고검장)은 자신의 책에서 “윤석열 검찰에 수사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계좌를 제공한 다수 중 한 명이기에 공모관계가 입증되기 위해선 추가 물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은 사건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지난해 9월 발의)된 특검법 수사대상은 △사망사건 원인 규명 △수사외압 여부 규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이 전 장관을 주축 주대사에 임명(현재 사직)시킨 경위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발의한 추가 특검법을 병합시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추가 공개 압박하고 있다. 21대 국회도 법안권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간주된 특검법(지난해 9월 발의) 처리는 가능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경태 부산 사하를 당선인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한지아 국민의미래 여부 규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이 전 장관을 주축 주대사에 임명(현재 사직)시킨 경위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최근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 부분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법야권의 일원으로서 협력할 생각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공약한 한 전 위원장 관련 특검법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전 장관의 딸 논문표절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특검법이 5월말로 임기를 종료하는 21대 국회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학교환경, 추가적 조치 아닌 ‘필수적인 조치’

김명지 자치도의원, 학생 건강 보호
학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 방안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교 내 공기 질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명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도내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일상의 중요성과 더욱 강화된 대비책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면서 “특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학교들에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공기 순환 장치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 장비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설치된 공기청정기 장비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병원균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청에 학교들이 장비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이와 더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일정과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교 커뮤니티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본질 비껴간 청년 나이 논의 중단해야”

김슬지 자치도의원, “청년정책 목표·취지 퇴색 우려”



청년 정책 본질을 퇴색시키는 무차별한 청년 나이 상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상향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될은 물론 파이 나눠 먹기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령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슬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가 되는 청년인구는 현행 39만 2,460명(18~39세)에서 14만4,344명이 증가한 53만2,894명이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전북도에서는 청년 나이 상향을 주제로 실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설문 조사 및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 청년 연령 상향 필요성의 근거를 ‘고령화, 청년 범위 확대에 인한 청년 정책 수혜자로서의 가능성 확보’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 연령이 20대 아닌 39세까지라는 점에서 이미 평균수명이 고려된 것이고, 정책 범주를 늘려 수혜자를 늘리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예산과 집행조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 대상자만을 확대해선 안된다”며 “세대별 정책 마련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청년 연령 상향으로 연관 지어 눈 가리기용으로 이용을 멈추고, 세대별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행정 정보 원천 봉쇄 관행 개선 시급”

김성수 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이 1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의 지구단위 개발사업 수지계산서, 도청 홍보영상 제작 관련 주무관 채용 서류 등을 사례로 들며,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에 대해 의회 자료요구가 들어오

면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고, 아예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 등도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며,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성수 의원은 도지사 차원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의회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도입해야”

박용근 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산림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촉구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도내 4곳의 도입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조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조구역은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박용근 의원은 “공익용 보전산지라

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입공원 내 사유림부터 산림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도내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보양산도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도입공원이 있다”며 “도립공원 면적의 80%가 사유림인데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어, 더 이상 이분들의 회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욱이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경관 제공 및 휴양, 대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가 심한 전북에 꼭 필요한 자원이며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에서 선제적 도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도내 지자체간 불합리 행정구역 조정을”

나인권 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서서 도내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농촌근대화 추진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역변화가 발생했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아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의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자치도 내 일부 농경지는 경지정리사업 이후 농지 한복판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경계가 존재해 2개 지자체를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있고,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갈자리 형태로

경계를 이루는 등 생활권과 어긋난 경계가 다수 존재한다.

나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자치도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소요조사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도내 지자체의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노력과 상반되는 전북자치도의 모습을 지적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조항에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이 첫 번째로 표기할 정도로 행정구역 관리는 가장 중요 업무”라며, “도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지자체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확대·시행에 ‘허둥지둥’

이수진 자치도의원, “도 차원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 등도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며,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성수 의원은 도지사 차원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의회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한 컨설팅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 역시 3월 28일 구성됐다. 이처럼 전북자치도의 능력향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컨설팅은 무려 2달이나 지연됐다. 그 사이 4월에만 군산, 정읍 등 3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져 현재 중대재해처벌 위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업체 조사 분류체계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분석을 실시해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수가 15배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3명(탐정, 주무관, 실무수습)에 불과한 전북자치도 중대재해 관련 인력 보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해 도민이 다치고 슬진다면 전북자치도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전북자치도 주도하여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15일 제 29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고경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민원서비스 제안’을 역설했고, 최재기 의원은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16일부터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의원들의 조례안 5건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에 대한 안전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